

다산포럼



김 태 희  
다산연구소장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인상이 좋았다. 끝 없이 펼쳐진 평야가 인상적이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필자가 방문한 중서부 지방의 조그만 도시 사람들은 인사성 바르고 친절했다. 넓은 미국을 여행하는 것도 즐거웠다. 국내선 비행기는 고속버스타는 것만큼 간단했다. 여대선이 분쟁으로 소란할지라도 그곳은 평화스러웠다. 그러나 9·11 이후 사정은 달라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더 지난 후부터였다. 비행기 탑승 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졌다. 국내선도 마찬가지였다. 탑승을 위해 줄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다. 한쪽에선 재수 없이 우연히(?) 걸린 사람이 살살이 뭍수색을 당했다. 출입국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

제국의 몰락

은 친절하기는커녕 험악한 느낌이 들었다. 미국은 달라졌다. 로마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고, 몰락 또한 그랬다.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 지위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지난해 말의 뉴스(연합뉴스 2016/12/08 기사)에 따르면, 소련 해체를 예언하기도 했던 옌한 갈통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에서 떨어질 것이라 예견했다고 한다. 2009년 저서에서는 미국 몰락의 전조로 파시즘 발호를 꼽았다. 그는 이미 조지 W. 부시 시로 인해 5년이 앞당겨진 2020년에 미국이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에이미 추아는 ‘제국의 미래’(이순희역, 비아북, 2008 ; 원제 Day of Empire, 2007)에서 세계 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이외에 상대적으로 높은 종교적·인종적 관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추아는 ‘미국의 쇠퇴는 관용의 상실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인종주의적 언행은 추아의 걱정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가브리엘 콜코는 ‘제국의 몰락 -미국의 패권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지소철 역, 비아북, 2009 ; 원제 World in Crisis :

The End of the American Century)에서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리더십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은 오랫동안 군사적 행동으로 이득을 보았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도 전쟁을 통해서였고, 서부의 개척도 아메리카 인디언을 총으로 몰아내서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정복자 스페인을 쿠바에서 몰아내고 태평양의 괌과 필리핀을 얻은 것도 전쟁을 통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리더 국가로 등장하게 된 것도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한 채 정전협정으로 일단락 지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패퇴했다.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에 올랐지만, 소련군의 수렁이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작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라크전쟁은 재앙이 되었다.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집단 군사 장비로 즉각 제압할 것이리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되었다. 콜코는 군사력 만능 시대는 끝났다고 보았다. 값비싼 첨단 무기를 내세워 오만과 독단에 빠져 있을 때, 가난한 나라는 유효한 값싼 무기들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 미국이 특정국 정권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킬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 파생된 작은 무장 집단들의 게릴라전은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다. 이들의 비판적 전망은 기실 미국의 반성을 기대한 충심 어린 고언이다. 갈등은 몰락의 경고와 함께 “미국이 역동성, 자유와 진보를 옹호하는 전통, 생산성과 창조성, 코스모폴리탄 전통 등을 바탕으로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연합뉴스 같은 기사) 추아는 인종적·종교적 관용을 유지할 것을 충고했다. 콜코는 상황 변화와 위기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호소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매우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갔다. 우리는 전쟁의 파멸적 결과를 경험했다. 지금도 분열과 증오라는 심각한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전쟁으로 우리 운명을 개선할 수 없다. 갈수록 군사적 수단 한계가 분명해지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군사적 수단은 정치·외교적 수단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미국을 걱정하는 것이겠는가. 우리의 운명이 걱정스러워시다. 더욱이 북한의 상황은 우리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지 않은가.

社 說

‘우왕좌왕’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개혁해야

‘살충제 계란’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계 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국민 안전 측면에서 재조정·개편해야 한다”며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서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 식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번 계란 파동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한 마디로 ‘우왕좌왕’이었다. 정보 공유로 함께 대처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엇박자를 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검출 농가가 있는 지역을 밝히고 농가 명은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식약처가 해당 농가 이름과 계란 검대기에 적힌 문구를 밝히는 등 갑자기 대처로 소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마르스 사태 때처럼 부처 간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면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를 계기로 본 식품안전 시스템’ 긴급토론회에서 광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유명무실하다시피 한 현행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식품안전 관리체계는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통·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로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품 사고가 터졌을 때 신속·정확하게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빚 대책 없나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국내 가계 빚이 급증세를 이어 가면서 14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1년치 국내총생산(GDP)에 근접하는 수치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 ‘시한폭탄’이라는 경고음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 부채 총액은 1394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 724조 원이었던 가계 부채는 2015년 이후 매년 10%씩 폭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부당산에 의지한 경기 살리기에 나서면서 2014년 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2015년 10.9%(117조8000억 원), 2016년 11.7%(141조2000억 원) 등 연이은 급증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상승 폭은 노르웨이(6.3%포인트)와 중국(5.6%포인트)에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이 관련 항목을 집계하는 세계 43개국 중 세 번째로 최상위권이었다. 가계 부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 큰 문제는 갖가지 대책에도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인 가계 부채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지만 가계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만으로 증가세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부채 폭증을 막는 방안과 함께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의 소득을 늘려 주고 가계의 소비 위축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만큼은 가계 부채 급증세를 꺾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부당산 투기 억제, 가계소득 증대, 자영업 살리기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NGO칼럼



김 유 빈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어서...” “네가 먼저 유혹한 것 아니야?” “성폭력 피해는 비정상적인 애들이나 당하는 거지.” “혹시 돈 때문에 고소한 것 아니야?” “그렇게 될 때까지 너는 뭐했어?” 등 언젠가 한번쯤, 당신이 성폭력사건을 접했을 때 했던 말 혹은 의문일 것이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심지어 피해시간이 언제였고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정보에 관심을 가지며 그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통념들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범죄의 피해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상실하게 한다. 이 어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 연대를 시작해야 할 때

법은 가해자의 심신 미약 상태를 고려하고 피해자와 사건을 노출시키는 성폭력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한다. 언론은 소위 기사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 내용을 기사화한다. 미디어매체는 성폭력사건을 “00녀”사건 등 여성혐오적 표현을 난무하며 피해자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한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성폭력으로 신고해서 멀쩡한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잡는다”고 가해자를 두둔한다. 피해자의 주변(가족, 친구 등의 지인)에서는 아직도 조선 후기를 살고 있는 듯 한 사람들이 정조관념을 적용하며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아닌 ‘몸을 버린 사람’으로 치부한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이들이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과 사회 전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 즉, 2차 가해가 된다. 또 다른 가해 속에서 피해자는 끊임 없이 본인의 피해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본인을 피해자와 해야만 한다. 하지 만 이렇다 할 지지기반도 없이 치유되지 않는 본인의 폭력 경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다. 결국 피해자는 ‘회피’, 다시 말해 가해자가 ‘합의’라고 부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합의 과정에도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수많은 폭력이 숨어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 제도적, 사회적 보호와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합의 중용’에 시달리게 된다. 가해자와 그의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연락한다. 합의의 유무에 따라 형량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 뿐만이 아니다.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 역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와 합의 중용, 협박하고 피해자의 관계자를 에게도 끊임없이 연락한다. 심지어 불법적으로 피해자와 관계있는 이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다. 실제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고고도 하지 않는 우리는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를 향해 자신들의 추적이 들어맞아 신이 나더라도 한

냥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는다. “성폭력으로 신고하고 얼마 받았데”, “신고한 이유가 다 있었어” 피해자는 이제 성폭력 피해 생존자로 사회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사회 전반에 팽배한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2차 가해, 어디서부터 수정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사건이 너무도 개인화돼 있다는 것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상담, 지원한다고 해서 성폭력을 예방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정서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성폭력사건은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 아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사회 도처에 빈번히 일어나며, 불편함을 회피하는 우리는 이를 보이지 않는 척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회피하게 되면 결국, 성폭력 피해 생존자 역시 회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부더라도 우리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 연대해 그들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땅의 모든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우리가 연대함을 전한다.

기 고

역사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

‘삼대가 먹고도 넘칠’ 재산을 넘겨줬다. 이완용의 증손자가 조상 땅을 찾아가던 일 ‘아재 개그’가 아닌 현실이었다. 영화 ‘암살’은 주인공이 자신들을 암살대로 뽑아 죽이려던 밀정을 차단하며 끝이 난다. 영화일 뿐 역사는 정반대였다. 1948년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첫 헌법에 친일파를 차단하는 특별조항(제101조)을 넣었다. 뒤이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는 과정이 희한하다. 과정년들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난동부리며 ‘반공’을 내세운 반민법 반대 집회를 정부가 지원한다. 경찰은 법제정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 대한 테러를 사주하다 실패하자 이들을 남포당 프락치로 몰아 체포한다. 일제 밀정이던 이종영(대동신문 사장)은 ‘반민법은 망민법’(亡民法)이라 조롱한다. 2009년에 국내외 학계 수십 년의 연구와 자료를 모은 ‘친일인명사전’이 출간됐는데, 이를 주도한 연구소는 ‘총독 좌빨’ 연구소라며 테러당하고, 역사학계는 ‘좌파 학자’들이 모인 집단으로 전락했다. 1948~49년에 반민법에 반대하던 구호와 행태가 21세기에 되살아나 씁쓸했다. 1949년 시작된 반민특위의 활동은 ‘울음’과 ‘바름’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었다.

박흥식(화신백화점 사장), 최린(민족대표 33인), 최남선(독립선언서 기초), 이광수 등이 연달아 연행됐다. 그 중 친일경찰 노덕술의 체포는 압권이었다. 일제 때부터 ‘고문의 명수’로 악명 높던 그는 해방 후에도 수도경찰청(현 서울시경) 수사과장으로 사람들을 고문했다. 그 중에는 영화 ‘암살’과 ‘밀정’에서 겹쳐지는 ‘밀양 사람’ 악산 김원봉이 있었다. 그 뒤 그는 의열단 동지들과 만나 울분을 토로한 뒤 복으로 갔다. 이전의 고문치사사건 주범으로 수배 중이던 그는 1949년 1월 25일 반민특위 특검대에 체포됐는데, 경찰관 4명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노덕술을 연행하자 난리가 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위원들을 불러 ‘치안 문제’라며 그의 석방을 압박했다. 경찰들은 그를 비롯해 반민특위에 연행된 친일 경찰들을 석방하라는 신문 광고를 내고 동시에 파업하며 사표까지 냈다. 그럼에도 반민특위가 흔들리지 않자 1949년 6월 6일 새벽 중공병정찰사 윤기병(서울시경국장 역임)이 이끄는 무장 경찰대가 반민특위를 공격했다. 그리하여 반민특위는 표지석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노덕술은 무죄 석방된 뒤 군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생사협의를 편 헌병 장교로 근무하다 수뢰 혐의로 파면됐다. 4·19혁명 직후 치러진 7·29총선에

고향에서 출마했다. 해방 직후 한 논자는 “친일파를 숙청하는 것은... 이들은 독립조선이 자기네에게 처단을 내릴 것을 두려워하는 한편, 전일(前日)에 향유하는 권세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독립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완전한 숙청이 없이는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건설은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주장처럼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자체로 비극이며 이후로도 많은 숙제를 남긴다. 일제가 만주에서 자행한 학살은 정부 수립 전후 재현되고 6·25전쟁 때는 더욱 심해졌고, 100만 여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이유 없이 학살당했다. 노덕술이 김원봉에게 저지른 고문은 그 뒤로도 계속됐다. 김근태, 권인숙, 박종철은 그 피해가 알려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백년’을 꺼냈는데, 그 출발점에 역사가 있다. 위안부, 강제징용,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5·18민주화운동, 세월호 등등은 끝맺지 못했다. 잘못된 과거는 풀지 못한 숙제가 되고, 현재와 미래의 또 다른 비극을 만든다. 과거의 잘못을,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하는 이유다. 요즘 유행어가 된 ‘적폐청산’도 마찬가지다.

無 等 鼓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선언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쇄기를 박았다. 건국절 논란은 지난 2006년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훈 당시 서울대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로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처음 공론화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붙었다. 이후 대한민국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건국됐다. 이는 일반적 주장에 대해 보수 세력은 건국은 초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15일이라고 주장하며 맞서 왔다. 학계의 지배적 견해인 1919년 건국론은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이라고 쓰여 있다. 1919년을 대한민국의 해로, 1948년을 재건의 해로 본 것이다. 보수 세력이 국부로 떠받드는 이승만에게 보낸 건국 통보문에는 ‘1919년 4월 17일 한국이 완전히 조직된 자주 통치 국가가 됐다’고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48년 7월24일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30년 7월24일’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9월1일 최초 관보의 발행 일자도 대한민국 30년 9월1일이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은 1919년 당시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해 국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도 미국이 영국의 지배로 영토·주권이 없었던 1776년 독립해 보수 세력은 건국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식민 지배하에서 독립하는 국가의 경우 3요소를 처음부터 완전히 갖춘 경우는 드물다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은 1948년 건국절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친일 후예들이 반민족 행위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제발 더 이상 항일 투쟁을 꺾어내리고 임시정부의 범등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지경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

건국절 논란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